

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22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지방세징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“결손처분” 용어를 “정리보류”와 “시효완성정리”로 구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“결손처분”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“시효완성정리”로 처리하고,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정리보류”로 용어를 구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(안 제3조, 제3조제1항, 제3조제1항제2호, 제3조제2항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징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)”을 “(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결손처분”을 “정리보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(결손처분)액”을 “(정리보류)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결손처분”을 “정리보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제3조(체납 또는 <u>결손처분</u> 자료 제공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<u>결손처분</u>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| 제3조(체납 또는 <u>정리보류</u> 자료 제공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리보류</u> ----- ----- -----.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체납(<u>결손처분</u>)액,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| 2. ---(<u>정리보류</u>)액----- ----- |
| ② 시장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<u>결손처분</u>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. |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리보류</u> ----- ----- -----. |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세징수법」

제9조(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,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이의신청, 심판청구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(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10조 및 제11조의2에서 같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(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)인 자
2.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(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)인 자

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06조(정리보류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.

1.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
2.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

3. 삭제

4. 채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납처분을 하여야 한다.

| 소 관 부 서 | | 정 수 과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자 | 과 장 | 김 진 호 |
| | 담 당 | 김 봉 한 |
| | 담 당 자 | 양 혜 경 (480-6873) |